

통일문제, 논의대상에서 이젠 실천목표로

통일방법 및 정책 제시한 연구서 출간 잇달아...통독 관련서도 10여종 선봬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정상회담 실무자 접촉 계의 등으로 인해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와 소연방의 해체란 외풍으로 주춤했던 통일논의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보며 겨우 여기까지 왔구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 일어날 일」 진웅기, 예음)라고 지적한 게이오대 가미야 후지교수의 말처럼, 통일의 진도가 더딘 것은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인내로써 통일을 추진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지난 11일 평화문제연구소(소장 신영석)는 한완상 부총리 등이 참석한 ‘문민시대 통일정책 세미나’를 개최했고, 한국심리학회(회장 이장호)도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문제를 귀순자들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통일과 심리적 화합’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해 통일논의의 활기를 엿보게 하고 있다.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 채택 등이 호재로 작용해 한때 집중 논의돼다가 다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 IAEA의 사찰 거부, NPT 탈퇴로 냉각기를 겪은 통일논의는, 그같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다량의 출판물을 그 ‘증거’로 남기고 있다. 남한에서의 통일논의에 대해 한남대 이봉철교수가 「통일과 통일논의」(인간사랑)에서 “기왕의 통일논의는 크게 틀잡아 ▲민족모순 해결론과 ▲계급모순 해결론, ▲기능적 교류확대를 통한 단계적 접근론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정리한대로 통일론을 담은 책들 역시 이런 논의의 구분에 따라 성격의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함께 비록 해답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전례로 작용한 독일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서와 증립화 통일론,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통일정책을 분석한 책들이 서가를 차지한다.

독일통일 교훈 역할한 연구서 10여종이나

먼저 논의만 무성했던 우리에게 통일의 가능성을 증명해준 독일통일 이후 쏟아져 나온 통독관련서들은 「동독의 통일혁명」(을유문화사) 「독일분단에서 통일까지」(강천)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지식산업사) 등 무려 10여종에 이른다. 그 가운데 “패배적 분단 고정론에서 벗어나 독일에서 교훈을 얻자”는 의도로 출판된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

통일논의는 침체와 활기를

거둬하며 하나의 틀을 잡아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제까지 연방이니 다단계

통일론이니 하는 외형적 방법론에

치중해, 정작 통일국가상 모색에

소홀했다는 결점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부주도의 통일논의를

국민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인가」(연합통신)는 정치·경제·사회 등에서 통일의 조건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해 낸 것. 다시말해 고르비의 역할이나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같은 외부요인을 살핀 뒤 “통일문제를 거론도 하지 않으면서 실리추구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주력한 동·서독 국민에게서 통일의 조건을 골라내자”는 논리를 전개한 책이다. 독일식 흡수통합이 과연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통일 후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고민하는 독일의 예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안겨준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들이 이런 책들에 실려 있다.

소련에 이어 중국과도 수교를 맺음으로써 한국의 북방외교는 마지막 대상으로 평양만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또 통일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책들도 있다. 즉 북한의 통일정책 등을 밝힌 것들인데, 전 동아일보 통일연구소장 여영무씨의 「통일의 조건과 전망」(문예출판사)은 남북한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방안 등을 북한의 대화전술 규명으로 풀이하고 진단한 책. 저자는 “북한의 대남폭력 혁명노선이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밝힌 뒤, 북한의 실세와 김정일 주도 권력그룹의 실상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이 카이로선언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의 통일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면, 「북한의 통일정책」(신정현 엮음, 을유문화사)은 북한의 통일정책만을 집중 조명한 책이다.

12편의 논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북한이 시기별로 제시해온 민족해방론 등 통일방법과 정책을 수록하면서, 주체사상과 통일정책의



‘우리의 소원’인 통일에 대한 논의와 방법론을 제시한 책들.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김필에 참여한 김갑철 교수는 “북한사회의 주체성은 1인의 주체성이고 2천만의 비주체성이 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렇듯 북한과 남한의 통일방법을 다룬 책들과는 달리 통일 가상시나리오를 작성, 제시한 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가 펴낸 「2천년에 열리는 통일시대」(동아일보)가 그것으로, “2천년에는 경제통합이, 2010년에는 정치통합이, 2020년에는 통일공화국이 수립된다”는 가상 아래 정치·경제·국토개편·복지의료 등 12개 분야별로 통합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예상하는 통일에 이르는 길은 모두 4가지로, 첫째는 북한체제가 민중봉기 등에 의해 침몰하거나 한국의 무력침공에 의해 대한민국에 편입되는 경우, 둘째로 남한체제의 북한으로의 편입, 셋째 협상에 의한 통일국가 형성, 넷째 점진적 통일국가 수립인데, 네번째 항이 “단기적으로는 분단지속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진화적 통일모형”임을 강조한다. 이어 점진적 통일국가 수립을 택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체제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김일성 사후 체제 수호성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예상을 하고 있다.

지난 91년 토론회를 조직해 그 결과물로 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양호진 외, 나눔)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평화적 자주적인 방법에 의한 민족 동질성회복을 위한 통일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통일의 국제환경 변화와 북한체제의 변화를 정리하면서 통일방법론을 펼친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는 먼저 정치개혁

을 이룸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조건을 들고 있다.

“통일논의의 주체는 이제 국민이어야 한다”

서문에서 분단정부들에 의해 거의 독점되다시피한 통일논의의 마당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통일과 통일논의」의 저자 이봉철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변화를 진단하면서 우연한 김일성의 생사나 반체제 쿠데타의 가능성을 앞세우고 있으며, 외형적 통합방법론만이 무성하다고 비난하고, 통일국가상 모색이란 목표과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사실 어떤 통일이 중요한가를 외면한 채 수많은 방법론만을 나열한 구조논리의 폐해는 데리다·푸코의 말처럼 “지도자들의 논리와 다름없는” 것이고 홍보차원의 정부주도 통일논의를 지양하기 위해서도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지금까지 ‘연방’ ‘연합’ ‘2단계 5단계 통일론’ 등의 무수한 방법론이 통일논의의 결과물로 남겨졌다면 앞으로는 어떤 통일국가상을 모색하는가에 주목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통일과 관련해 나오고 있다. 또 통일 후 남한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집단반목을 우려하거나 북한이 마치 남한의 식민지나 ‘80년의 광주’가 되지 않겠느냐는 통일 이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이 이제 논의로 그치는 대상이 아닌 실천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기자